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부위원장 모두발언

2019.5.30.(목) 14:00~15:00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금 융 위 원 회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I. 가계부채 관리 정책 방향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각 업권별 협회, 상호금융중앙회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 정책은 크게

- ①가계부채의 양적 증가세를 안정화시키고
- ②가계부채의 구조적 건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 ①우선, 최근까지의 가계부채 증가세를 살펴보면,
'17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이 점차 낮아지는 등
증가세가 하향안정화되는 추세입니다.

* 가계신용 증가율(%) : ('15말)10.9 ('16말)11.6 ('17말)8.1 ('18말)5.9 ('19.1Q)4.9

그동안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평가합니다.

다만, 여전히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거시적 측면에서 가계부문 소비나 경제성장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증가세 관리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②가계부채의 구조적 건전성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연체율 등 대출건전성 지표가 안정적이고,
대출구조도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가계부채 관련 금융부문 완충력과 상환능력을 보여주는
LTV, DTI 등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 가계대출 연체율(조금융권, %)	: ('13말)1.55 ('15말)0.86 ('17말)0.64 ('18말)0.69
*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행권, %)	: ('13말)15.9 ('15말)35.7 ('17말)44.5 ('18말)45.0
주담대 분할상환 비중(은행권, %)	: ('13말)18.7 ('15말)38.9 ('17말)49.8 ('18말)51.6
* 주담대 평균LTV(은행권, %)	: ('13말)51.0 ('15말)53.5 ('17말)53.4 ('18말)51.6
주담대 평균DTI(은행권, %)	: ('13말)35.4 ('15말)36.2 ('17말)29.1 ('18말)29.7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첫 걸음은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확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단계적으로
상환능력 심사체계 구축을 추진해 왔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꾸준히 LTV를 관리해 왔으며,
DTI 제도를 보완한 新DTI를 '18년부터 시행하였고,
금리 변동에 대비한 Stress-DTI 등도 도입해 왔습니다.

* 新DTI (Debt to Income)	: (모든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 이자) / 연간소득
* Stress-DTI	: '실제금리 + 스트레스 금리(최소 1%p)' 하여 산출한 DTI

다만, 여타 가계대출의 경우,
금융업권이나 금융회사별로 대출취급 과정에서
상환능력 심사 수준과 강도 측면에서
다소 편차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일선 창구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지 못하거나,
담보가치에만 의존한 채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차주가 여러 금융회사나 금융업권에 걸쳐
다수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환능력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는 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하였습니다.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이를 보완하여
가계대출 전반을 포괄하면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적 틀입니다.

$$* \text{Debt Service Ratio} = \frac{\text{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text{연간소득}}$$

정부는 '17.10월 DSR 도입계획을 발표한 후
'18년부터 단계적으로 DSR을 도입해 오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경우 시범운영을 거쳐
'18.10월말부터 본격 시행중이고,
제2금융권의 각 업권도 '18년부터 순차적으로
DSR을 시범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거쳐 제2금융권에도 DSR이 본격 시행될 경우,
가계부채 취급 전반에 걸쳐
상환능력 심사 체계가 완비되는 것입니다.

II.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제2금융권의 DSR 시범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상호금융권, 저축은행권을 중심으로
DSR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업권별 평균DSR : (카드사) 66.2% (보험사) 73.1% (캐피탈사) 105.7%
(저축은행) 111.5% (상호금융) 261.7%

업권별로 주력 대출상품, 이용 차주의 특성 등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업권별 DSR 수준에 편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高DSR로 취급된 대출 유형과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금융회사·지점·조합 단위에서
소득확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거나,
차주의 소득증빙이 용이하지 않아
소득이 과소추정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시범운영 결과를 고려하여,
제2금융권 DSR 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하고자 합니다.

① 우선, 업권별 DSR 관리지표 수준은
각 업권의 여건과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차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제2금융권 차주들의 금융접근성을 위축시켜
서민·취약차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도록
DSR 관리강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하여
DSR의 점진적인 하향안정화를 유도하겠습니다.

* 평균DSR 관리지표('21년말까지 달성) : (카드사) 60% < (보험사) 70%
< (저축은행) 90% < (캐피탈사) 90% < (상호금융) 160%

③ 제2금융권 차주의 경우,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소득증빙 방식을 추가 보완하고
소득·부채 산정방식 등도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조정하겠습니다.

④ 아울러, 관리지표 시행 이후,
업권별·대출 유형별 DSR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관리강도의 수준이 적정한지,
예기치 못하게 애로를 겪는 차주들이 있지 않은지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필요시 DSR 관리방식을 조정·보완하겠습니다.

은행권의 경우 지난해 10월 DSR이 본격 시행된 이후,
소득자료 징구절차를 확립하고
과다한 DSR이 산출되는 경우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DSR 심사가 일선 창구에서 자리매김하고
전반적인 DSR 수준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 은행권 평균DSR('18.6월 시범운영시→'19.1Q 시행후) :
(시중은행) 52%→41% (특수은행) 128%→69% (지방은행) 123%→72%

제2금융권에서도 DSR 시행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금융회사 지점, 지역조합, 비대면대출 등
가계대출 공급채널 전반에 걸쳐
상환능력 확인이 필수절차로 자리매김하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III. 마무리 말씀

최근 IMF는 2019년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 IMF('19.5.13.), 「Republic of Korea, 2019 Article IV consultation」

그동안 우리 정부가
LTV, DTI, DSR 등 가계부채 관리조치들을
효과적으로 도입·운영해 온 결과,
가계부채 리스크를 상당폭 경감시키고
금융불안정 발생 소지를 차단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가계부채의 효과적인 관리 덕분에,
거시경제 운용에 있어 운신의 폭을
더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처럼 대외적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 리스크가 잘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었던 바탕에는
증가속도와 건전성 관리, 상환능력 심사체계 구축 등
선제적이고 정교한 대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오늘 논의할 제2금융권 DSR 시행방안도
이러한 정책적 대응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제2금융권에 DSR이 효과적으로 안착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계부채의 구조적 건전성을 제고시켜,
우리 금융시장과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